

‘수월성 교육종합대책’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

글 | 김종관 _ 교육인적자원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 ckimc@moe.go.kr

영재교육은 그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인 측면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을 논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5. 31 교육개혁’ 조치에 의하여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영재교육 강화를 제안한 이후다. 또한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활용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영재교육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장애의 정도에 맞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갖추어 공교육 차원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듯이, 영재교육도 보통교육 체제하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타고난 잠재성을 사장 당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 정책은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우리 헌법의 교육기본권에 충실하고, 그 결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다.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교육은 1983년 경기도에 경기과학고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 교육부는 1996년도부터 한국교육개발원(KEDI)으로 하여금 ‘영재교육 활성화 체제구축 연구’를 위탁 수행하게 하였다. 법제상으로도 1997년 기존 교육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교육기본법 제1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영재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의무규정을 두었다가,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시행은 2002년 3월 1일)하고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2002년 4월 18일)을 공포·시행함으로써 법적 기반 위에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중·장기 영재교육 비전 제시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영재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을 2004년 12월에 발표했다.

평준화 기본틀 유지, 우수 인재 발굴·양성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12월 발표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1974년 고교 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30여 년 동안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보편성 교육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과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오래 전부터 우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식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육성과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2004년에 발표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나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의 결과 세계 상위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준화제도의 근간을 유지한 가운데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 운영이



나 평준화 제도내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평준화 보완에 노력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2004년 발표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AP제도 도입, 집중 이수 과정 운영 등과 더불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엮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수월성 교육은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전체학생의 5%만을 별도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을 겨냥한 교육의 기본 목적을 천명한 것이다. 단지 그 동안 일반학교 교육에서 우수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과 일반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우수 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도록 하게 한 것이 그러한 오해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표명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을 통한 보편성 교육 강화, 부진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책임제, 소외계층을 위한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종합대책과 같은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다.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이 제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지난 2002년에 수립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보완하여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할 수 있어 학교교육의 질을 한 차원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체 학생의 1%, 8만 명 영재 교육중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제기하는 질문은 '누가 영재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왜냐 하면 영재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야 영재교육대상자가 나오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교재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영재의 정의는 영재교육 분야, 수용규모, 교육정책 목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수준에서는 '일반학생을 상회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잠재능력이 뛰어난 학생' 등으로 정의하고, 그에 맞추어 각 교육청 또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

2006년도 영재교육 현황(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

구분	영재교육기관 및 학생수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영재학교	1교(과학)	24	432
영재학급	338	635	11,493
영재교육원	231	1,521	27,086
계	570	2,180	39,011

는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영재의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 '포함의 원칙'과 '제한의 원칙'이 있다. 포함의 원칙은 영재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해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안을 두어 선발보다 교육내용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제한의 원칙은 영재의 정의를 아주 엄격하게 정의해 영재라고 여겨지는 학생들만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게 된다.

우리 나라의 정책기조는 포함의 원칙을 따르되, 영재교육 시행 초기에 프로그램 개설의 가능성 정도, 양성 가능한 교원 등 각종 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우선 2010년까지 전체학생의 약 1% 수준인 약 8만 명의 학생에게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에 시·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과 정규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이미 8만 명에 도달하였다. 이제 영재교육 대상자의 확대보다는 영재교육의 내실화에 주력할 단계가 온 것이다.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수학·과학 분야 영재학교는 1개교를 운영중에 있다.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로 영재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며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재학급은 4~5개 학교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교원, 학생 선발, 프로그램 등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권장하고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수학, 과학, 예술, 정보, 발명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영재들만의 집중교육이 가능하도록 '풀 아웃'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대학, 전문기업 연구기관, 외국 영재기관 등과 연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풀 아웃' 프로그램은 주 1회 정도 소속 학교에 가는 대신 영재교육원에 출석하여 하

루 동안 영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영재교육원에 출석할 경우 학교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은 각 영재교육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각 영재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목적, 그 수준 및 방법을 설정한 후 주체적으로 영재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교육감의 선발권은 2006년 12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이양되었다. 각 영재교육기관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형을 공고한 후,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재학생인 학교장, 지도교사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 교육기관에 제출한다. 이어 각 영재교육 기관별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방법을 정하고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영재는 잠재력 중심의 다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선발기준을 올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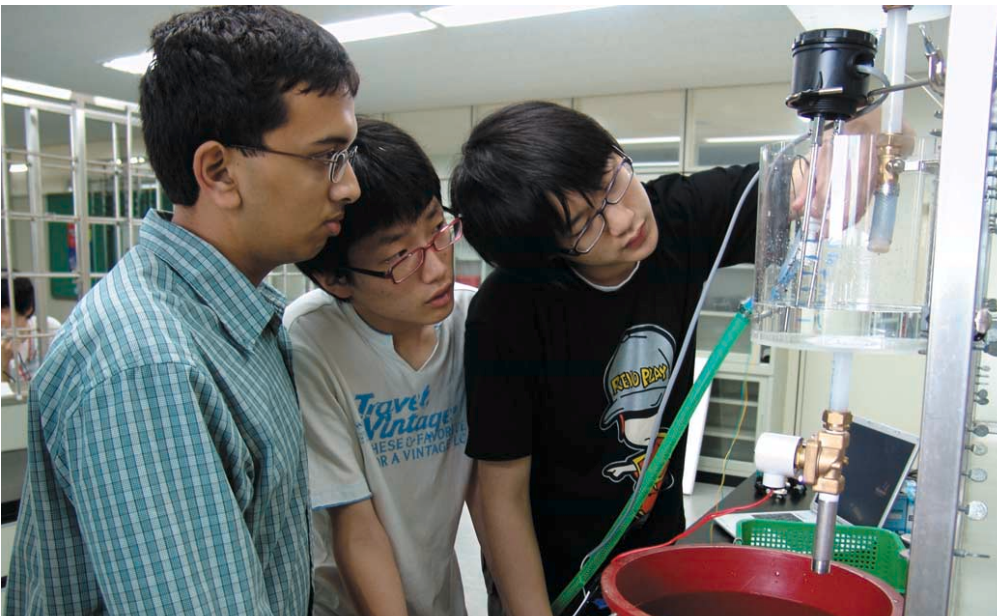
도시 벽지나 농·어촌 등 지리적 여건으로 영재교육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단위로 e-러닝 지원 체제와 연계하여 사이버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 사이버 영재학급과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점진

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교육과 출석수업의 병행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위한 '리치 아웃'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영재 선발에서 제외되기 쉬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청 또는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영재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복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는 사회경제적 혜택이 부족한 영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인정해주고 부족한 기초기능을 개발해 주는 'SRP 프로그램',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험이 부족한 영재들에게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는 'HOTS 프로그램', 뉴욕 할렘에서 발굴한 영재들을 기존의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잠재력을 계발하는 과도기적 서비스인 '프로젝트 시너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는 54개 영재교육기관에서 2천2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더욱 높여야

영재교육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와 관련된



국제학생과학전람회 -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열고 있는 '2006 국제학생과학전람회'에서 세계 각국서 모인 학생들이 팀을 나눠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2006년 8월 22일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이버 영재교육기관운영계획

연도	'05	'06~'07	'08~'09	'10
추진내용	연구 검토	4개 권역별 시범 운영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 운영 성과 분석 · 확대 방안 연구	16개 시·도교육청

영역별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 자료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영재교육이 교과 선행 학습 또는 상급학교 진학 수단으로 흐르기 쉽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중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양만 영재교육이고 실제로는 예전의 특기·적성교육 형태로 운영된다면 학생, 학부모로부터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신으로 영재교육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영재교육기관 운영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이 영재교육기관 운영을 평가한 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담·지문을 하여 개선시켜 나갈으로써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학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또한 주요 과제다. 현재 영재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속진 및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재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시기, 고급 인력의 양성·활용에 있어 고등교육 과정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재교육은 고등교육과정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와 KAIST,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영남권 대학이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을 시행하는 데 시급한 부분 중 하나가 전문성을 지닌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약 1만1천 명의 연수를 받은 교원을 배출할 계획인데, 영재학교의 경우 국내·외 전문가를 투입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실제 영재교육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즉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각 영재교육기관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였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준거로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는 영재교육 판별도구와 학습 자료의 개발·보급은 물론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다. 특히 자녀를 영재로 만들기 위해 사교육 기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재학습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재교육을 기능적 영재 교육이라고 하며, 영재 판별도구를 사전에 외우게 하거나 영재교육이란 이름으로 실시하는 선행학습은 학생들의 영재성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즉 과도한 영재교육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발달에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영재교육은 오히려 그나마 갖고 있는 창의성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물리학 신동 웨이양강은 우리에게 영재교육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 사례다. 중국의 물리학 신동이라 불린 그는 2세 때부터 한자를 읽고, 8세에 중학교, 13세에 대학에 입학한 신동으로 2003년 8월 대학으로부터 퇴학 통지를 받았다. 이 신동의 실패 뒷면에는 부모의 잘못된 지도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기능성 영재교육은 자녀의 건전한 발달에 악영향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널리 알려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각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로써 영재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하나의 교육제도로 조심스럽게 정착되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널리 알려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각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로써 영재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하나의 교육제도로 조심스럽게 정착되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㉔



글쓴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영란여중 운영위원장,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